

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(김윤덕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8598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21. 3. 8.

발 의 자 : 김윤덕 · 김정호 · 김철민
김홍걸 · 박상혁 · 안호영
윤재갑 · 이규민 · 이원욱
임종성 · 정춘숙 의원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코로나19 팬데믹의 장기화와 이에 따른 정부의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등의 방역조치로 인하여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경제적 피해는 날로 커지고 있으나, 이에 대한 충분한 보상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.

또한 우리 헌법 제23조제3항은 ‘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·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법률로써 하되,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’라 규정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에는 정부의 방역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등의 손실보상에 대해서는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이 없는 상황임.

이에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감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하여 방역당국의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하여는 정부가 적정한 보상을 하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헌법이 명시한 정부의 역할을 다하도록 하는 한편, 소상공인

이 방역조치에 적극 동참할 수 있는 유인책을 마련하려는 것임(안 제12조의4부터 제12조의6까지 신설).

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의4부터 제12조의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2조의4(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조치로 인

해 발생한 손실보상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(이하 “방역조치”라 한다)로 소상공인이 피해를 입은 경우 제12조의5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소상공인의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.

② 보상의 대상, 기준, 규모 및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제12조의5의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한다.

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2조의5의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「중소기업기본법」에 따른 중소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상공인 이외의 자에게 보상할 수 있다.

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손실을 입은 자가 방역조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보상금의 감액, 지급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.

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은 자가 방역조치 의무를 위반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해당하는

경우 그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.

⑥ 그 밖에 보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12조의5(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설치) ① 제12조의4에 따른 보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 손실보상심의위원회(이하 “심의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 심의위원회는 보상의 대상, 기준, 규모, 절차 및 지원시책 등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여 그 결과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시한다.

③ 심의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심의를 하는 경우에 방역조치의 수준, 기간 및 소상공인의 소득,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.

④ 심의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심의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(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), 지방자치단체의 장(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),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과세정보 등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, 요청을 받은 관계 공무원과 관계 기관의 장은 요청에 따라야 한다. 이 경우 자료제출 요청은 「국세기본법」 제81조의13 등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된다.

⑤ 소상공인 피해에 대한 적정한 손실보상 기준 등을 심의위원회에 건의하기 위하여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 및 특별자치도에 손실보상지역심의위원회(이하 “지역심의위원회”라 한다)을 둘 수 있

다. 이 경우 심의위원회는 지역심의위원회의 건의사항을 반영하여
공정하고 합리적인 손실보상 기준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.

⑥ 심의위원회 및 지역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12조의6(심의위원회 지원 등을 위한 전담조직의 설치) ① 중소벤처
기업부장관은 심의위원회의 운영지원, 효율적인 손실보상 등을 위하여
필요한 경우 전담조직을 설치할 수 있다.

② 전담조직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.

1. 심의위원회의 운영 지원

2. 손실보상을 위한 자료수집·처리

3. 손실보상 체계 구축 및 운영

4.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운영 및 보상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
③ 전담조직의 구성·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손실보상에 관한 적용례) 제12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이 공포
된 날 이후 발생한 손실부터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<u><신 설></u></p>	<p><u>제12조의4(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조치로 인해 발생한 손실보상)</u></p> <p><u>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(이하 “방역조치”라 한다)로 소상공인이 피해를 입은 경우 제12조의5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소상공인의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.</u></p> <p><u>② 보상의 대상, 기준, 규모 및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제12조의5의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한다.</u></p> <p><u>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2조의5의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「중소기업기본법」에 따른 중소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상공인 이외의 자에게 보</u></p>

<신 설>

상할 수 있다.

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손실을 입은 자가 방역조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보상금의 감액, 지급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.

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은 자가 방역조치 의무를 위반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그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.

⑥ 그 밖에 보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12조의5(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설치) ① 제12조의4에 따른 보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 손실보상심의위원회(이하 “심의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 심의위원회는 보상의 대상, 기준, 규모, 절차 및 지원시책 등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여 그 결과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

에게 제시한다.

③ 심의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심의를 하는 경우에 방역조치의 수준, 기간 및 소상공인의 소득,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.

④ 심의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심의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(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), 지방자치단체의 장(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),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과세정보 등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, 요청을 받은 관계 공무원과 관계 기관의 장은 요청에 따라야 한다. 이 경우 자료제출 요청은 「국세기본법」 제81조의13 등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된다.

⑤ 소상공인 피해에 대한 적절한 손실보상 기준 등을 심의위원회에 건의하기 위하여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 및 특별자치도에 손실보상지역 심의위원회(이하 “지역심의위

<신 설>

원회”라 한다)을 둘 수 있다.

이 경우 심의위원회는 지역심의위원회의 건의사항을 반영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손실보상 기준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.

⑥ 심의위원회 및 지역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12조의6(심의위원회 지원 등을

위한 전담조직의 설치)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심의위원회의 운영지원, 효율적인 손실보상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담조직을 설치할 수 있다.

② 전담조직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.

1. 심의위원회의 운영 지원

2. 손실보상을 위한 자료수집·처리

3. 손실보상 체계 구축 및 운영

4.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운영 및 보상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
③ 전담조직의 구성·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

로 정한다.